

행정사실무법(제3회)

1. A시는 2014. 5. 30. 구(舊) 도심지의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공모하였다. 이 공모에는 甲, 乙, 丙 3개 업체가 지원하였다. 공모심사 결과 乙이 사업자로 선정되고, 甲과 丙은 탈락하였다. 甲은 2015. 5. 4. 乙이 해당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부족하고 사업자 선정과정도 공정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시장에게 ①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② 심사위원 인적 사항 및 ③ 乙업체의 재정상태와 사업실적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A시장은 2015. 5. 18. 위 청구 중 ③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①과 ②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이라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같은 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다. 甲은 A시장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15.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이에 甲은 2015. 8. 31. A시장을 상대로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행정심판 청구요건의 적법여부 및 A시장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40점)

2. 비송사건절차에서 항고의 의의 및 종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3. 비송사건 관할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 (1) '토지관할'과 '우선관할 및 이송'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 (2) 관할법원의 지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5점)

4. 행정사법 제31조(감독상 명령 등)에 따른 '장부 검사'와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른 '자격취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1.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1. 문제의 소재

(1) 논점의 정리

- ① 취소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심판의 대상이 처분에 해당하여야 하며,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청구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이 사례에서는 甲의 취소심판청구가 적법한지와 A시장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이다.

(2)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 취소심판에 대하여 설명하고, 청구요건의 적법여부 및 A시장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겠다.

2. 취소심판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3. 청구요건의 적법여부

(1) 처분

- 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② 거부처분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일 것,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 신청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청구인적격

-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 ②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기간

- ①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심판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4) 소결

① 거부처분도 처분이므로 A시장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다.

② 甲에게는 ①과 ②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있으나, A시장이 ③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③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③ 甲은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④ 따라서 甲의 취소심판청구는 ③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청구의 적법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청구이다.

4.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적법여부

(1) 정보공개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대상이 된다.

(2) 소결

甲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①과 ②는 비공개대상 정보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고, ③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므로 A시장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5. 사례의 해결

① 甲의 취소심판청구는 ③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청구의 적법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청구이고, A시장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②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는 ③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요건심리 결과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인 각하재결을 하여야 할 것이고, ①과 ②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甲의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재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2. 항고의 의의 및 종류

1. 항고의 의의

항고는 상급법원에 대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이다.

2. 항고의 종류

(1) 보통항고

- ① 보통항고는 그 제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항고로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 ② 비송사건에서의 항고는 보통항고가 원칙이다.

(2) 즉시항고

- ① 즉시항고는 그 제기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항고로서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즉시항고는 법률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다.

(3) 재항고

- ① 재항고는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이다.
- ② 재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4) 특별항고

- ①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제기하는 항고이다.
- ②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문제3의1. 토지관할과 우선관할 및 이송

1. 서설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처리하느냐의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하며, 심급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이 있다.

2. 토지관할

(1) 의의

토지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사이에 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2) 원칙

① 비송사건절차법은 토지관할에 관하여 원칙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각종의 사건마다 당사자와 법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토지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② 토지관할의 표준은 사람의 주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물건의 소재지, 채무이행지, 소송계속지 등 매우 다양하다.

(3) 특칙

① 법원의 토지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② 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③ 마지막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이 있는 곳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3. 우선관할 및 이송

(1) 우선관할

관할법원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이렇게 정해지는 관할을 우선관할이라 한다.

(2) 사건의 이송

우선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그 법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데, 이를 사건의 이송이라 한다.

문제3의2. 관할법원의 지정

1. 의의

관할법원의 지정이란 법원의 관할지역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여러 개의 법원의 토지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관할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절차

- ①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한다.
- ②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문제4. 장부 검사와 자격취소

1. 서설

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자를 말한다.

2. 장부 검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사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3. 자격취소

(1) 내용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사가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사유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②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 ③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 ④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